

◎한국 IPG의 활동

· 제31회 한국IPG세미나 ‘한국 영업비밀 누설 대책’ 주제로 개최 01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5
「신 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 개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증가하는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쫓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이 된 한국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초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초월’과 ‘현실세계(우주)’가 조합된, 요즘 유행하는 이 단어는 무엇 일까요?

① 유니버설 ② 버츄얼 리얼리티 ③ 메타버스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제31회 한국IPG세미나 ‘한국 영업비밀 누설 대책’ 주제로 개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입으로 형성되어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나, 유출되는 순간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2015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에서는 한국의 제도 및 사례에 특화된 ‘영업비밀 유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5월, 최신 법 개정과 영업비밀 침해 사례, 통계, 판례 등을 변경 및 추가하고 실무 상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보강한 ‘한국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표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21일에는 제31회 한국IPG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한양국제특허법인의 김세원 변리사와 강석훈 변리사가 ‘한국 영업비밀 누설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의 츠치야 부소장이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한국 영업비밀 누설 대책

1. 최근 한국의 영업비밀 침해 사례

- 한양국제특허법인

· 중소기업 상대 기술 탈취 사건 (한화솔루션 vs SJ이노테크)

2011년, 한화솔루션(이하, ‘한화’)과 SJ이노테크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 위탁 합의를 작성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SJ



김세원 변리사



강석훈 변리사

한국IPG의 활동

이노테크에 네 종류의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한화는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2015년,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생산하게 되면서 SJ 이노테크와의 하도급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SJ이노테크는 한화가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한 행위는 하도급법 상 기술 탈취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 측은 SJ이노테크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1심에서는 원고 SJ이노테크가 피고 한화 측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매뉴얼에 첨부된 도면을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로 판단하여 한화 측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경쟁사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했음에도 피해 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총 1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유용 분쟁 민사 소송으로서, 일부라도 중소기업이 승소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 2배라는 역대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었으나, 개발비(약 40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되어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유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하도급 계약에 의해 기술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기술자료 활용 범위에 대해 문서화할 것
- (2)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3) 원청업체라도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 시에 개발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개발한 기술이 자체 개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II.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요건 1] 비공지성

비공지성에서 비밀성이란,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즉 비공지성은 절대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또는 일정 범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사용된 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라면 그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해외 기술을 수입 및 개량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기술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2]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 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별한 노력 없이 역설계를 통해 얻은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영업비밀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비밀성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영업활동에 바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가 없더라도, 독립된 경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일본 영업비밀의 요건 중에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있는데, 판례에서는 유용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 3] 비밀관리성

구 법률에서 비밀관리성이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구 법률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비밀로서 관리’라는 문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 행위는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판례를 대조해서 알아본 비밀관리성 요구 수준

매체 종류	매체 종류
종이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 표시 •자물쇠 기능이 있는 문서함, 금고, 서랍 등에 보관

전자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 매체에 비밀 표시 첨부 •전자 파일 폴더명에 '비밀' 기재 •패스워드 설정, 접근, 유출 기록 파악 프로그램 등 설치 •전산 네트워크에 방화벽, 백신 프로그램 설치
물건에 영업비밀이 화체된 경우 (제조기기, 금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이 있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 •사진 촬영 금지 표시 •해당 물건 리스트화, 열람 공유화
매체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보의 범위 및 카테고리를 구두로 전달하거나 입증한다는 관점에서 리스트화 및 문서화하여 가시화
기타	비밀임을 고지, 접근 대상자 및 방법 제한, 보안 교육 실시, 사무실 및 연구실 등 출입 제한 및 금지, 경업 금지 계약 및 비밀 준수 계약 체결, 정보 누설 등에 대한 징계 조치, 보안 책임자 설정, 출입 카드, 지문 인식, CCTV 설치, 거래처 등 관리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에는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신용 회복 청구, 경업 금지 청구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경업 금지 청구는 경업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업 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전직한 기업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전직 금지 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금지청구권의 일환으로 경업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 의한 대응,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일반 상법 상 특별배임죄에 의한 대응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무역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 조정 및 중재 등에 의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II. 한국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유형으로 표적형 이메일 공격과 랜섬웨어가 등장했습니다.

표적형 이메일 공격이란, 공격자가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정부기관이나 첨단 과학 기술 보유 기업에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비밀 정보를 훔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 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비트코인 등의 가상 화폐)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주로 메일 안의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면 감염되는데, 공격자가 만든 다크웹 사이트를 통한 감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비밀 유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링크(URL)에 주의하고, 의심되는 메일은 절대 열

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컴퓨터와 파일 공유 서버를 백업하고, 백업 후 복원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S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IV. 영업비밀 유출 방지 대책

1.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원이 입사하면 영업비밀 준수 계약서 및 경업 금지 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세요. 만약 신규 직원이 직무 경험자라면 이전 직장 재직 시에 영업비밀 보호 계약이나 경업 금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시 받은 영업비밀 준수 계약서와 더불어 별도로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별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직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보다는 퇴직자가 유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퇴직자에게는 보호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 종류를 더욱 세분화시킨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퇴직자가 사용한 컴퓨터, 자료 등을 모두 반납시키고, 사내 인트라넷 ID 및 이메일 ID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유출 사실을 발견하면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에 관련 부서, 임직원 업무 내용, 기록물 접근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유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제품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추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 문서 등을 회수하고 외부 유출이 의심되는 네트워크 등의 경로를 차단하여 추가 유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출 현장의 상황, PC의 HDD 등 관련 물품을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 진술서 등도 빠르게 확보해 두세요. 이때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 확보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1) 유출기술 설명 자료, (2) 피의 기업 관련 자료, (3) 피의자를 특정하는 자료, (4) 피의자 사용 자료, (5) 피해기술 관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출기술 설명 자료란, 도면 및 사양서 등 유출된 기술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사용 자료에는 회사 계정이나 자료, 접근 내역, 전산 네트워크 접근 기록, 디지털 기기 등이 있으며, 피해기술 관리 방법에는 접근 권한 설정 내용, 비밀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IPG}

●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 (주요 부분만 발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

한국 대통령 선거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진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보수 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일대일 맞대결 구도가 되어 2022년 3월 9일 투개표 결과, 윤석열 후보가 1,639만 4,815표 (48.56%),



이재명 후보가 1,614만 7,738표 (47.83%) 를 획득하여 윤석열 후보가 격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2021년 12월 말에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2026)'과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2022~2026)' 등 2개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권 교체 그 자체와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법안 심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법 개정 현황 (전부 2022년 4월 20일 시행)

1.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의 연장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기존 30일 이내였던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건의사항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2020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재외자의 지정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분리출원제도의 도입 (특허법)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해서 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조치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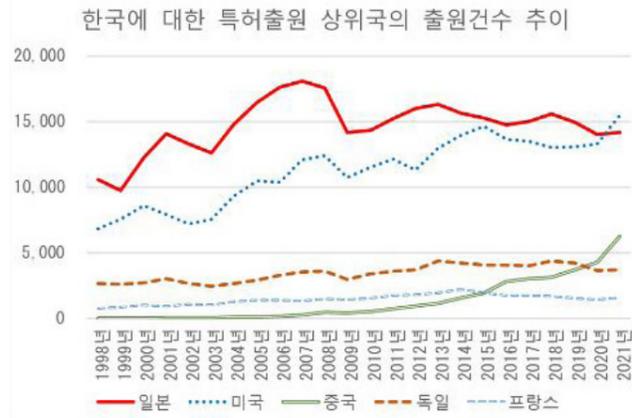
일본에서 말하는 '한정 제공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과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의 한국 지식재산 관련 이슈

1.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허 출원건수가 2위로 하락

한국에 대한 해외의 특허 출원건수는 일본이 오랫동안 선두를 지키고 있었지만 2021년에 미국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하락했습니다.



출처: 한국 지식재산 통계 연보 (1998~2020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FOCUS (2021년) 기반 작성

2.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2022년 3월 23일,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백서'(184페이지)라는 이름의 백서를 발간하여 인공지능을 특허법 상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서둘러 법을 개정하기보다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 조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IPG}



정답은 ③메타버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공간 속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한국 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 한국특허청 (2022.3.7)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하나둘씩 대면 케이팝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대면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인기 가수들의 팬 상품(굿즈)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 케이팝 인기에 편승한 굿즈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방탄소년단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경로(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한국 국내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 한국특허청 (2022.3.15)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은 3월 15일 화요일 14시에, 경북 경주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 발명 전문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미래의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이 발명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설치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3개의 전시·체험공간(발명채움관, 도전해움관, 미래키움관)으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어울림광장과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의 전시·체험관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모든 학생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 한국특허청 (2022.3.22)

특허청은 경제주체연구소와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결과를 3월 22일 화요일에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 신청은 최근(2016년→2019년)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 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의 특허 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가 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서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의 세대별 주요 특허 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④ 메타버스 관련 NFT, 콘텐츠 특허출원 전년 대비 각각 5.3배, 2.8배 폭증

| 한국특허청 (2022.4.4)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연평균 24%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1,828건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평균 143%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보다 2.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의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해 제도 개선사항, 특허 행정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IPG}

File No.160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 개요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 해당)를 두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5년마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제30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어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 및 공포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해당 계획의 개요(비전, 목표, 5대 추진전략, 16대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비전>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목표>

1. 국가전략분야 핵심 IP 경쟁력 확보

표준특허 점유율 확대: 2020년 18% → 2026년 23%

2. IP 기반의 국가혁신성장 지속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IP무역수지 흑자 전환: 2020년 18억 7,000만 달러 적자 → 2026년 흑자

3. 디지털 경제에서의 IP 침해 방지 및 보호역량 강화

IP보호수준(IMD): 2021년 세계 36위 → 2026년 세계 20위

<5대 추진전략/16대 추진과제>

전략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추진과제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추진과제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추진과제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정비

전략2. 전략적 IP 보호 체계 강화

추진과제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추진과제2. 국내·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추진과제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전략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과제1. IP 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추진과제2. 중소·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추진과제3. 중소·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전략4. 신산업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추진과제1. 차세대·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추진과제2. K-콘텐츠 보호 체계 강화

추진과제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전략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추진과제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추진과제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추진과제3.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추진과제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아쉽지만 지면 관계로 항목만 게재합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상세 내용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2년 지식재산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File No.161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증가하는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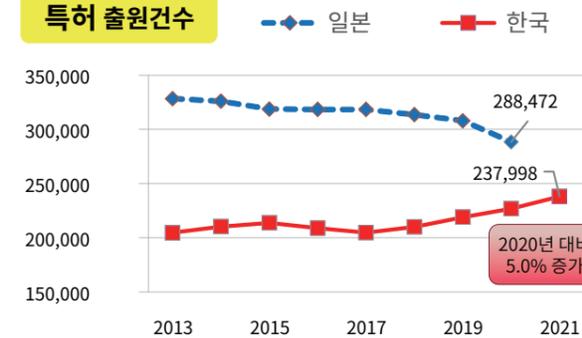
한국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건수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4 분야 합계에서 2019년에는 처음으로 50만 건을, 2020년에는 55만 건을 돌파해 2021년 출원건수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59만 2,6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출원건수(2021년 출원건수는 본고 집필 시점 기준 미공표)와 비교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건수가 적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1. 특허

한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은 역대 최고치인 23만 7,998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미국 등 해외 출원도 2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뒤에 설명할 디자인, 상표는 10% 내외) 한국 국내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일본 특허청에 대한 출원건수는 2001년에 약 43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양에서 질로 전환이 이루어져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출원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아니면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많아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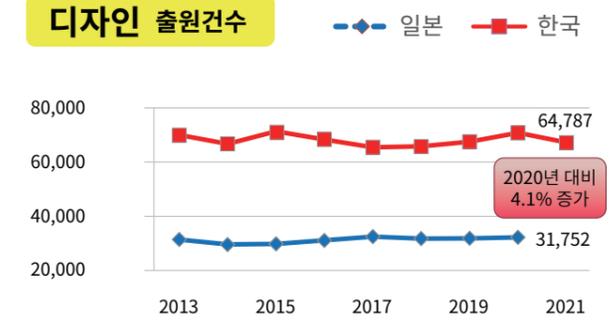
특허 출원건수



2. 디자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디자인출원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대략 일본 의장 출원건수의 2배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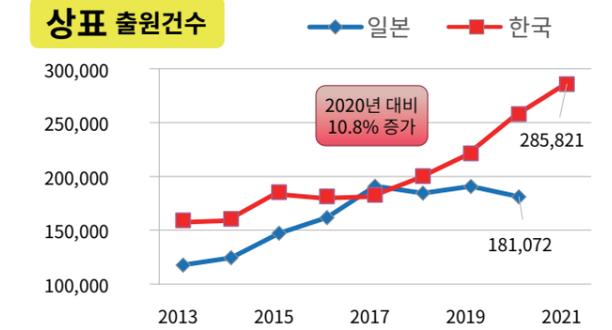


3. 상표

상표 출원건수는 그 나라의 경기동향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국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에 이어서 두 자릿수% 상승해 특허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특히 디지털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업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같이, 최근 일본보다 한국의 출원건수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건수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는 국가의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곧 힘'이라는 측면이 있는 한편,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양에서 질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단위 인구 당, 단위 GDP 당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건수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아니면 변곡점을 맞이할지 2022년의 출원동향이 주목됩니다.

<이번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쫓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이 된 한국



2021년 말,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2026)'이 수립 및 공표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 지식재산 정책의 향후를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지식재산 정책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 및 공표되었습니다. 바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2022~2026)'입니다. '제1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처음 수립된 계획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새로운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수립 배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21일에 시행된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추가된 제2조의 2를 근거조문으로 하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이 해당 법 개정에 의한 첫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어째서 지금 시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일까요? 그 답은 상기 법 개정의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자 관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발췌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OECD 가입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흔히 말하듯 과거 한국의 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캐치업 방식이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정보가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다른 기업과 다른 나라에 쫓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분야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계획 개요

(1) 영업비밀 보호 부문

[비전]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통한 혁신기반 구축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목표]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향상
-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경제적 피해 예방
-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확산

- [전략] 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 ②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 ③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2) 부정경쟁방지 부문

[비전]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목표]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수준 향상
- 부정경쟁행위방지로 경제적 피해 예방

- [전략] ①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 ②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지면 관계로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드릴 수 없지만 '제3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2026)'과 함께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관실 실장보좌, 심판관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